

잊혀진 죽음을, 인혁당 사건 그 후 25년

고문조작으로 사법살해 당한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빨갱이라고 매도했던
그 암울한 시대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은 인혁당 대책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에 후원하여 주실
분들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농 협 : 027-12-092791 (예금주 이돈명)

신한은행 : 218-12-056295 (예금주 이돈명)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천주교 인권위 내 전화)02-777-0643

2000. 4.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잊혀진 죽음들,
인혁당 사건 그 후 25년**



2000. 4.

■ 들어가는 순서잊혀진 죽음들, 인혁당 사건 그 후 25년

3

1부 발간사

4

2부 사형된 8인의 약력

7

3부 사건내용

1. 사건개요

2. 1, 2차 인혁당 사건의 수사개요

3. 사건내용

- ① 의혹과 물의로 점철된 인혁당 사건
- ② 36년 전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
- ③ 공소를 기각한 공안부 검사들
- ④ 당시 국회 정치쟁점으로 번졌던 1차 인혁당 사건
- ⑤ 민청학련 사건의 발표와 배후세력인 '인혁당 재건위'의 등장
- ⑥ 민청학련 사건의 소외그룹, 인혁당 재건위
- ⑦ 의문의 사형집행
- ⑧ 시신 탈취, 고문에 의한 조작 의혹
- ⑨ 민청학련 사건의 의문점
- ⑩ 사건은 묻혀지고...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노력들

29

4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 대책위관련 일지

■ 1부

발간사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온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출발한 지도 이제 3년을 맞이합니다. 잘못된 과거 정권의 관행을 뿌리 뽑고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국민과의 대화'용 멘트만은 아니었다고 아직은 믿고 싶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죽음들의 진상을 물어둔 채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죽은 자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결국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이 또 다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억울한 죽음을 막는 길이며 더 이상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개혁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천년의 세기도 넘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었던 밀레니엄 열풍. 새 천년에는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 주자며 여기 저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천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아직도 웅크린 채 다가오는 새 천년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세기의 정리되지 못했던 불온한 이름, 인혁당. '인혁당'이 불온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새 천년, 21세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9년 12월 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4월 6일 발족되었습니다. 법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법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하나하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00년 4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형된 8인의 약력

도 예 종 (당시 51세) ■



- 24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시 서악 출생.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4·19 이전 청구대학교(현 영남대) 경제학 강사.
- 60년 5월 영주 교육감 당선.
- 60년 10월 민주민족청년동맹 가입, 경북간사장.
- 61년 4월 민자통 중앙상무집행위원회조직부책 한미경제협정반대, 일본경제인입국반대, 2대학법반대 등에 주도적 활동.
- 64년 7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대법원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
- 67년 8월 25일 석방.
- <영남일보> 영천지사장 → 72년 2월 삼화건설 회장.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 현대공원에 안장.

서 도 원 (당시 52세) ■



- 23년 3월 28일 경남 창원군 대합면 신당리 출생.
-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 4·19 이전 청구대학교(현 영남대학) 학생주임, 정치학 강의.
- 4·19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위원장.
- 5·16 이후 혁명재판에서 7년 언도, 2년 7개월 복역.
- 67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 무죄판결.
- 74년 3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침술사.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경남 창원 선산에 안장.

이 수 병 (당시 39세) ■



- 36년 12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출생.
- 부산사범 경희대학교 졸업.
- 4·19 이후 경희대학교 학생민족통일연맹 위원장.
- 5·16 이후 구속, 혁명재판에서 15년형 선고, 7년 복역.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삼락 일어학원 강사.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경남 의령군 신반리에 안장.

하 재 완 (당시 43세) ■



- 31년 1월 10일 경남 창원군 이방면 안리출생.
- 단국대학교 졸업.
- 50년 입대.
- 57년 중사 제대, 양조장 경영.
- 4·19이후 민주자주통일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부위원장.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건축업.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 현대공원에 안장.

김 용 원 (당시 40세) ■



- 35년 경남 함양군 출생.
-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서울대 민통련대의원.(4·19이후 서울대 학생민통련 참가)
- 64년 동양중고 교사.
- 소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연행, 조사받고 나옴.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경기여고교사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우 흥 선 (당시 44세) ■



- 31년 출생.
- 6·25 당시 고교생으로 학도의용군 참전. 58년 육군대위 예편.
- 4·19 이후 통일민주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역임.
- 5·16 이후 수배.
- 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 1년형, 집행유예 2년.
한국골든 스탬프사 상무.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송 상 진 (당시 47세) ■



- 28년 9월 18일 대구시 동구 백암동 출생.
- 4·19 이후 대구사범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 57년 교원 노조 활동 및 민주민족청년동맹 총무국장.
대구 덕화중학교 교사.
- 60년 4월 19일 민민청 경북도위원회 사무국장.
- 64년 7월 소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행, 무혐의 석방.
- 74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당시 양봉업.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여 정 남 (당시 30세) ■



- 45년 5월 대구시 남일동 출생.
- 64년 6월 3일 경북고,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학, 경북대 학생회장.
- 69년 한일회담반대투쟁 주도 학생운동으로 3번 제적, 군입대.
복학.
- 71년 정진희 필화사건으로 구속.
- 72년 11월 10일 유신반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
- 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단체사건으로 구속.
- 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 75년 4월 9일 사형집행, 대구 칠곡현대공원에 안장.

■ 3부

사건 관련 내용

1. 사건 개요

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인혁당'.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이용훈, 김병리, 장원찬)들은 어떠한 증거물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

언론에서 터져 나온 고문 조작 사실들, 일각에선 중정해체론까지 나오게 했던 1964년의 '인혁당 사건'은 애초의 연루자 47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도예종에 대한 3년형을 최고로 일단락됐다.

그리고 10년 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유신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에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생데모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박정희에게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유신헌법의 수호 무기인 긴급조치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바로 '민청학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의하면 복귀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공산당계'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했다는 것이다.

'민청학련'과 함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그러나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모두 풀려나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중 8명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2. 1, 2차 인혁당 사건의 수사개요

순서	사 건	내 용	기 타
1	1964. 8. 14. 1차 인혁당 사건발표	<p>▶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사건발표. <중앙정보부 발표 결성경위> “3·24 이후의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인민 혁명당은 1962년 1월 우동읍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 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민 청 중앙위원장이던 우동읍과 동맹간사 김배영, 김영광, 민청청 간사장이던 김근수, 동 경북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작, 전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 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새강령과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발족하였다”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주도했던 학생운동서클인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불꽃회’와 고려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 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적발.</p>	<p>▶ 특 정 ◀ ① 4·19 혁신계인 물들 대거참여 ② 대구, 경북, 부산 출신이 대부분</p>
2	1964. 8. 검찰 기소거부	▶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47명에 대해 서울시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강원관 검사 등이 공소유지 불가능을 이유로 기소 거부.	담당검사 3명 사 표.(이용훈 검사, 현 변호사 재직)
3	1964. 9. 재기소	▶ 한옥신 검사 - 47명 가운데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4	1964. 9. 재수사	▶ 14명이 공소취하되고 나머지 12명은 반공법 위반으로 공소변경 됨.	
5	1965. 1. 20. 1심 판결	▶ 선고공판(재판장 김창규)에서 재판부는 피고 13 명중 도예종 반공법 4조를 적용 징역 3년을, 양준우 징역 2년을 선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판정.	
6	1965. 5. 29. 2심 판결	▶ 한옥신 검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항소부(정치원 부장판사)에서 선고공판이 열려 1심을 뒤엎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	

순서	사 건	내 용
7	1974. 4. 3. 긴급조치 4호 발표	▶ 민청학련 가담자는 물론 이들에 동조하여 시위에 참여한 자나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에게 사형까지 내릴 수 있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8	1974. 4. 민청학련 사건	▶ 이철, 유인태 등 당시 학생들이 주도한 반유신투쟁을 ‘민청학련 사건’으로 위음. 그리고 그 배후세력이 반국가 지하조직인 인혁당이라고 발표.
9	1974. 4. 25. 인혁당 재건사건 발표	▶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혁신계인사들이 74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 조정. 인혁당은 노동자, 농민에 의한 인민정권수립을 위해 학생데모를 뒤에서 조종한 좌익 지하당 조직 국내 좌파혁신계. 1024명 체포. 253명 구속. 180명 기소
10	1974. 5. 27. 2차 인혁당 사건	▶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의 23명의 관련자 기소. - 1심 비상보통군법회의(박현식 재판장) 피고인 203명 유죄판결 사형 14명, 무기 16명, 나머지 173명 집행유예 5~20년. (190명 항소) - 2심 비상고등군법회의(이세호 재판장) 190명중 70명 원심, 120명 형량 낮추어 선고. 사형 : 이수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8명)
11	1975. 4. 8.	사형선고 확정
12	1975. 4. 9. 사형선고집행	▶ 사형선고 20시간 후 집행 ▶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
13	1975. 4. 10. 국제엠네스티 성명발표	▶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4월 10일 한국정부가 인혁당 관련자 8명을 사형시킨데 대해 항의하는 성명발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관측자들은 8명에게 공공연히 석워진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증거는 한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끈덕진 도전을 받고 있음을 한국정부는 알고 있었다.”
14	1975. 4. 11. 한국일보	▶ 1번 기사를 통해 세칭 인혁당사건 관련자 중 도예종 등 8명에 대한 교수형 집행이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있었음을 이틀 후 보도

3. 사건 내용

① 의혹과 물의로 점철된 인혁당 사건

박정희 정권 18년을 통하여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가장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인혁당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대로 처리된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부터 제 1심, 항소심, 대법원의 확정판결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외로부터 커다란 의혹을 샀다. 일부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이란 조작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관련 피고인 8명이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스무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처형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리고 25년이 흐른 오늘까지, 인혁당 사건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② 36년 전,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4년 8월 14일이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남한 내 지하조직 사건이라는 것이 사건발표의 요지였다.

1차 인혁당 사건이 발표되던 64년은 김종필과 일본외상 오히라의 비밀협상 사실이 드러나면서, 굴욕적인 대일외교에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세력과 한일회담 재개를 앞둔 정부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던 때였다.

그 와중에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3.24 이후의 학생대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이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 우동읍 집에서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준의 사회로 통민청 중앙위원장이

던 우동읍과 동맹간사 김배영, 김영광, 민민청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 간사장 도예중,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작, 전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 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새 강령과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발족하였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대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대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인혁당 사건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도예중(40. 무직), 박현채(30. 서울대 강사), 정도영(39. 합동통신 조사부장), 이재문(31. 대구 매일신문 기자), 허표(31. 부산 봉래초등학교 교사), 박상홍(45. 서적상), 김경희(27. 민중서관 사원), 전무배(33. 서울신문 기자), 박중기(29. 한국여론조사 취재부장), 양춘우(29. 무직), 서정복(24. 서울문리대 철학과 4년), 김정강(25. 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정남(22. 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중태(24. 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현승일(21. 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도현(21. 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승균(26.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4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1964년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사건이 정보부의 손을 떠나 검찰에 넘어간 뒤부터 인혁당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북괴의 지령을 받은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류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설 등이 나돌기 시작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혁당 사건은 그 결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네 명의 담당검사가 만장일치로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③ 공소를 기각한 공안부 검사들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이용훈, 최대현, 김병리, 장원찬)들은 구속연장 만료일인 9

월 5일, 증거상으로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장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관련자들이 복귀의 지령을 받고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항명의 경위를 밝혔다.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3명의 검사는 기소거부와 함께 사표까지 제출했다. 이렇게 되자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발각 뒤집혔다. 대규모의 국가보안사범이라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는데 담당검사들이 무혐의라고 손을 들고 말았으니 수사당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담당검사로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던 장원찬 (現 변호사) 검사의 회고는 이렇다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해도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난수표가 나온다든지, 어떤 조직을 결성하려면 강령이 있다든지, 당에 가입해 선서를 했다든지, 가입증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진을 촬영했다든지, 녹음, 전화도청... 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저 정보부에서 작성한 조서만 있었다. 그런데 그건 피의자들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고 모두 고문에 의해 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하다못해 심증이 갈만한 무슨 종이쪽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정말 하나도 없어 답답했다. 공안부 다른 선배 검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해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양심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공지에 몰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당시 속직담당 검사였던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가까스로 서명토록 하여 간신히 기소할 수 있었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하나 둘 터져 나왔다.

④ 당시 국회 정치쟁점으로 번졌던 1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의 기소, 불기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피의자들의 고문설은 국회

에서 정치쟁점으로까지 번졌다. 9월 9일, 국회는 민복기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혁당 사건 기소경위에 관해 추궁했다. 그날 야당의원들은 “소위 인혁당 사건은 과거 굴욕외교반대대모를 벌인 학생들을 때려잡고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학생대모를 막기 위해 조작한 정치적 쇼가 아닌가?”를 물었다.

박한상 변호사(현 한국인권옹호협회장)는 “이번 사건은 6·3계엄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엉터리로 조작된 것이며, 이러한 엉터리 조작에만 여념이 없는 중앙정보부는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소.”라며 중정해체론까지 주장하며 추궁했다. 이 같은 추궁에 대해 민복기 법무부 장관은 “인민혁명당은 북괴 노동당 강령을 골자로 하는 규약을 토대로 조직된 불법단체고,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3·24에서 6·3까지의 학생대모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대답했다. 수사를 맡았던 공안검사들의 집단사표 제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마당에 민복기 법무부 장관의 대답은 설득력이 약했다.

이렇게 되자 인혁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점차 의혹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정보부의 발표대로 그들이 ‘빨갱이’인가하는 점에 대한 의혹이었다. 더구나 당국의 발표에 신뢰를 주기엔 다소 주저하도록 만든 부분이 또한 [고문]이었다.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았던 박한상 변호사가 밝힌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사례는 심각했다. 당시 서울교도소에서 피고인들을 면담, 조사한 뒤 “거의 대부분이 수사기관의 예심과정에서 전기 물 몽둥이 등으로 심한 고문을 당해 피까지 토한 피의자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 폭로된 고문사례

도예중 : 촬영실이라는 방안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다음 다다미 2장 넓이 위에 앉혀 놓고 물을 머리위로부터 부은 다음 수건과 로프로 결박, 나중엔 옷을 입히고 두꺼운 베같은 것으로 만든 잠수복 비슷한 것을 덮어 씌워 목과 다리만 나오게 했는데 몸을 조금만 밀어 붙이면 두 다리는 위로 올라가고 고개를 꼼짝 못하게 결박된다. 수건으로 코, 입, 얼굴을 씌워 막고 물을 부으면서 엄지 발가락에 끼운 전선에 전기를 통했다 끊었다 하는 전기고문을 당했다.

정도영 : 침대 위에 눕히고 물과 전기로 고문을 당했다. 고문 직후엔 2시간동안 의식을 잃었다. “고문까지 했으니 우린 약점을 잡힐대로 잡혔다.”면서 고문했다.

전무배 : 발가벗겨져 사지를 묶인 채 뒤로 누어진 상태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수사관들은 “인민혁명당 조직보따리를 내놔라”라고 옥박지르며 물고문을 했는데 전씨는 그 후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왔다.

고문폭로에 검찰 측에서도 조사에 착수, 일부 사실들을 확인했다. 기소단계에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인혁당 사건은 우여곡절을 거쳐 검찰은 서울고검의 한옥신 검사로 하여금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다.

애초의 연루자 47명, 그러나 판결은 도예종을 포함한 13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죄목도 반국가단체 구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 등의 반공법 위반혐의로 공소장을 경미하게 변경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들에게 도예종에 대한 3년형을 최고로 선고했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당초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은 용두사미격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 인혁당 사건은 부활한다.

⑤ 민청학련 사건의 발표와 배후세력인 ‘인혁당 재건위’의 등장

1972년 박정희에게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처음 1년, 유신 체제는 별다른 저항없이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힘의 논리는 그만큼의 저항을 불러왔다. 강압을 통한 박정희 영구집권 체제는 서울대 문리대의 시위를 시작으로 한 대대적인 유신철폐운동의 벽 앞에 부딪혔다. 재야 민주인사들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은 열흘만에 30만명을 넘길 만큼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종교계에서도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 등을 통해 유신반대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1974년 1월 8일,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선 전남대생 1천여명의 개헌요구 데모가 벌어졌다. 같은 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했다.

- 긴급조치 1호 : -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前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2호 :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이어 박정희는 긴급조치 1,2호를 발표한지 6일 후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3호’를 선포, 정치불안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무마코자 애썼다.

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유신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봉쇄하려 했지만 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 몰랐다.

개학철인 3월이래 술렁대던 학원가에서는 ‘3,4월 위기설’이 나돌았고 1974년 4월 3일 서울대를 비롯, 각 대학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뿌려진 유인물은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이란 생소한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다.

- 긴급조치 4호 :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을 겨냥, 이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주장과 행위는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의 조치가 발동된 것이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전개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 불법활동 양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특별담화를 통하여 학생데모와 관련, 정부가 대공관계와 연계된 모종의 강경책을 쓰고 나오리라는 전망이, 감지되었다. 그 같은 우려는 3주일 후인 4월 25일 중앙정보부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내용은 예상한대로 학생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10년만에 다시 듣는 '인혁당'이 그것이었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재일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 한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 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파도적 정치기구로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

10년만에 등장한 '인혁당', 그러나 인혁당 사건은 10년 전인 그때와 혐의 사실이 비슷했다. ▶학생들의 반정부데모가 뚜렷해질 시기에 배후조종세력으로서 ▶학생시위를 공산혁명으로 유도, 노동자 정권을 수립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점이 공통점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민청학련 사건에는 인혁당 뿐 아니라 윤보선, 지학순, 김동길, 김지하 등 각계 명망가들도 학생데모의 배후조종자로서 함께 기소되었다는 것이다.

민청학련과 관련돼 구속된 인원은 1,024명-, 긴급조치 하의 판결은 가혹했다. 이철, 유인태 등 학생운동 주동자와 김지하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 됐고, 무기징역 7명 총 32명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청학련 관련자들은 열 달이 채

못되어 전원 석방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학생이나 익히 알려진 명망가들이란 점 때문에 국가변란을 꾀했다는 죄목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석방의 환호뒤엔 숨죽여 통곡하는 이들이 있었다. 국민들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얼굴들. 인혁당재건위 즉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으로 잡힌 2차 인혁당 23명의 가족들이었다.

민청학련의 배후라는 인혁당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사건에선 소외된, 관심밖의 낮은 인물들이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 심리는 분리돼 진행되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이란 방대한 책자에서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을 사건에 관련시킬 경우 64년도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당국의 허점들이 노출되어 당국이 곤혹스러운 지경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인혁당 사건이 발표된 이후 수개월 동안 인혁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무명인들, 그것도 반공법 위반 혐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뜻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반공법 만능의 한국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국이 그 점을 의도하였다면 당국은 거의 성공을 거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0년의 공백을 두고 일어난 1, 2차 인혁당 사건의 수사에 같은 인물이 관련하였다는 사실이다. 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64년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실질적인 수사를 도맡아 한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은 64년 당시 중앙정보부 5국 대공과장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겨 버릴 수도 있지만 1차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여부를 둘러싸고 공안검사들과 세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람이 10년만에 단단한 준비 끝에 보복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설득력있게 나돌았다.

74년 5월 27일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혁당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23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은 1964년 6.3사태 배후조종자로 인혁당 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김상한과 재정책 김배영이 1962년 5월 월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된 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유포, 법정투쟁을 통해 극히 경미한 형을 받았다.

그 뒤 1967년 김배영이 인혁당 재건지령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어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 없었다.

인혁당은 그 뒤 지하로 잠복했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훈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장,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비상보통군법회의를 거쳐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사형 8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4명 ▶징역 15년 4명 등 하나같이 중형이었다.

⑥ 민청학련 사건의 소외그룹, 인혁당 재건위

형집행을 받은 23명에는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3년형을 살았던 도예종을 비롯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이하 사형언도), 정만진, 김한덕, 조만호 등 7명이었다. 그러나 도예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나왔다. 그럼에도 ‘인혁당 재건’이란 명에는 10년 동안 그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물론 23명의 인혁당 사건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가 70년대 한국사회가 지녔던 여러 모순에 대해 나름대로의 일정한 정도의 비판 의식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다.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하는데 연결고리 뭉을 했다고 정부에서 주장한 여정남 (31. 사형집행)의 경우가 그러하다. 43년에 태어난 그는 경북고를 거쳐 경북대 정치학과에 입학,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64년도에 있었던 6.3 시위를 주도하다 제적된 전력을 지니

고 있었다. 그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으나 필화사건, 포고령 위반으로 두 번 구속됐던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사형언도를 받은 8명 중 여정남을 제외한 주요인물들은 모두 이승만 정권기부터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혁신계 인물들이었다. 이후 평화통일론은 조봉암의 진보당이 공식적인 당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힘을 얻어갔다. 그러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함으로써 혁신계의 평화통일론은 숨죽여야 했다. 평화통일론은 4.19로 다시 터져 나왔다.(당시 이승만의 통일론은 북진통일론이었다.)

특히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은 4.19 직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진보적 조직인 민족민주청년동맹 (민민청)의 중심인물들이다. 이들은 민민청 활동의 전력 탓에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른바 혁명재판에 회부돼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

도예종의 경우 검거선봉을 비껴 피신했으나 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 ‘기소중지자’로서 체포됐다. 그가 1차 사건 때 3년의 실형을 언도 받은 데는 ‘기소중지’권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이야기되어진다.

대구사범 출신의 송상진은 국교교사로 있으면서 4.19 직후 교원노조 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도예종과 마찬가지로 1차 인혁당 사건 때 체포되었으나 곧 풀려났었다.

부산사범을 나와 한때 갑을국교교사로 있던 이수병은 경희대로 진학, 4.19 당시 경희대 민족통일연맹(학생 민통련) 위원장을 지냈던 4.19세대로서 ‘민족일보’ 수습기자 시험에 수석 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에서 15년 징역을 선고 받고 7년 동안 복역한 전력을 지녔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김용원도 4.19세대로서 서울문리대 학생민통련에서 활동했고, 64년 1차 인혁당 사건 때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나 바로 풀려났다.

육군대위 출신의 우홍선은 4.19직후 통일민주청년동맹 (통민청) 위원장으로서 5.16이 일어나자 한때 수배되기도 했다. 김용원과 마찬가지로 1차 인혁당 사건 때 체포돼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이렇듯 2차 인혁당 사건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 평화통일론을 계승한 혁신세력이었지만 이후 혁신계의 뚜렷한 활동은 없었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민청학련 사건 발표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⑦ 의문의 사형집행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은 파행적이었다.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과 분리되어 재판은 진행되었다. 수사는 끝까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이뤄졌고, 가족면회는 금지됐다. 가족 중 단 한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었던 법정에선 반론의 기회도 없었다. 사실심리 절차가 무시되기도 했다.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의 얘기를 들어보자.

“피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기회도 안 주고 검사의 일방적 심문만이 있을 뿐이다. 판사들은 묵묵히 앉아서 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냥 요식행위만 갖추고 일사천리로 끌고 나가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사실심리도 없이 변호인보고 바로 변론을 하라고 했다.”

도예종의 부인인 신동숙도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면회도 한번 안 시키고 변호사도 제대로 변론 못하게 한다. 본인이 무슨 의사표시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전혀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 이런 재판이 어디있나?”

파행적인 재판 속에서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힌 인혁당 관련자의 가족들은 어느 한 곳 호소 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구명운동은 백방으로 펼쳐졌다. 구명운동으로 중앙정보부까지 불려갔던 가족들은 다시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공판기록이 변조된 것이다. 공판기록이 변조된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창일의 부인 임인영이다.

“무슨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펴더니 다른데는 안보여주고 전창일씨 부분만 보여줬다. 탁 펴놓더니 이걸 보래요 이렇게 하고도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공판기록을 쳐다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국가변란을 모의 했습니까’ 하니까 전창일씨가 재판정에서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했습니다’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네, 했습니다’ 그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묻는 대답에

또 그렇게 ‘네,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하도 기가막혀서 거기서 따졌다. 너희들 공판기록이라는게 이거냐. 너희들 어떻게 공판기록까지 조작을 하느냐해서 막 덤볐다. 그랬더니 취조하던 사람이 얼른 공판기록을 덮더니 캐비닛에 갖다놓고 열쇠로 잠겼다.”

조작된 공판기록 부분은 법정증인의 한 사람인 김종길 변호사에 의해서 확인됐다. 그러나 최종판결은 변조된 공판기록을 토대로 선고됐다. 그리고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에선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원심 그대로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겐 사형이 내려졌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고려대엔 긴급조치 7호가 발동됐다. 75년 4월 8일의 일이었다. 이날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의 인혁당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 앞엔 또 하나의 파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고 채 스무시간도 지나지 않은 새벽, 8명 전원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그들에겐 재심의 기회도, 탄원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날 가족들은 사형집행일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남편의 면회를 갔던 이영교씨(하재완의 처)는 그 날을 이렇게 얘기한다.

“면회는 일체 안됐으니까 꿈도 꾸지 않았다. 남편에게 사식이라도 넣어주려고 새벽부터 교도소에 갔다. 교도소 문이 잠겨 있더라. 교도소 형편에 의해 오늘은 면회 안한다고 써 붙여놨더라. 그 길로 이상해서 전창일씨 부인한테 전화해보니 라디오에 나왔다고...”

느닷없는 사형집행은 가족들에게만 충격이 된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전창일씨가 기억하는 인혁당 관련자들의 사형집행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데 4월 8일날 사형집행장소를 청소시켰다는 거다. 그 시간을 후에 따져보니 대법원에서 재판하기 전부터 청소를 시킨 거다. 오전 11시에 재판이 있었는데 10시부터 여기에 청소부들 동원해서 청소를 시작했다. 당시 구치소 소장의 말은 내일 사형집행이 있으니 여기 청소 시키는 거다. 최종 확정 나기 전, 이미 내일

집행하려고 여기를 청소한 것이다.”

사형집행 소식은 이들이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됐다. 2차 인혁당 사건은 1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혹으로 조작설이 나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신체제 하에서 순치되기 시작한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 때와는 크게 위축된 이 땅의 언론 위상이었다. 석연찮은 사형집행에 의혹은 그 이후 점점 커져갔다.

그 당시의 군법회의법에 따르면 사형집행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했다. 사형연도가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6개월 안에 사형집행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있는지 5일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종철 국방부장관이 상고기각 당일로 사형집행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일이었다. 어느 법조인의 말을 빌려보자.

“만일 형집행을 안하고 계속 살려두면 어떤 조작이라던가 가공적인 혐의가 밖으로 알려져 박정권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적어도 재심청구 기회를 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다. 다음날 바로 사형집행 한 자체가 권력의 야만이다.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말 그들이 말한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빨갱이었다면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음날 집행할 이유가 없다.”

급작스런 사형집행 이후 사건조작 논란은 계속 됐지만 1차와 2차 사건을 모두 지휘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6국장 이용택의 입장은 단호하다.

“형은 확정 됐으니 확정되면 한시간 후라도 집행하지 말란 법 없다. 확정판결 났으면 그거로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주 쾌쌌하게 생각하고 빨리 집행 해버려라. 말썹 꾸러기다. 그때 학생들 막 데모도 많이 일어났을 때니까, 학생들의 시위를 비롯 체제 도전세력의 움직임이 가라앉지 않은 어수선한 시국에 그런 극한수단을 써서라도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기억되 기론 정보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빨리 사형이 집행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⑧ 시신 탈취, 고문에 의한 조작 의혹

사형집행 이후 가족들에게 남겨진 것은 황망히 시신이라도 수습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가족들 앞엔 또 한번의 참극이 닥쳐 있었다.

박정권의 정치적 계산이야 어디에 있던 재심의 기회조차 박탈해간 75년 4월 9일의 비극은 가뜩이나 고문에 의한 조작혐의가 따르는 인혁당 사건에 의혹을 더하기에 충분하였다. 8명의 사형수 시신을 가족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랑이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8명의 시신은 다음날까지 모두 가족에게 인도되었으나 그 절차는 오로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 구치소 주변을 다수의 경찰로 에워싼 채 울부짖는 가족들의 의사와는 달리 정부는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8인의 시신을 따로따로 연고지로 옮겨 갔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충돌이 벌어졌다.

4월 10일 송상진의 시체를 영구차에 실은 유가족들은 함세웅 신부가 주임으로 있던 용암동 성당에서 연미사를 드리려 했다. 그러나 성당 얼마 못미쳐 영구차는 경찰에서 동원한 견인차에 끌려 벽계 화장터로 향했다. 그리고 탈취된 시신은 군인들의 손에 화장됐다.

시신탈취의 이유는 뒤늦게야 가늠됐다. 한 시신에서, 체포되고 1년여가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고문흔적들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 백차가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 남편 이수병의 시신을 신고 녹번동 집으로 돌아온 이정숙씨는 다시 한번 몸서리쳤다. 당국에서 끝끝내 남편의 면회를 허락해주지 않은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오후 6시반쯤 집에 도착해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우선 남편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잠을 자는 듯 평온한 편인데 손톱, 발톱 부분이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양쪽 움푹 들어간 곳도 새까맣어요. 등허리도 마찬가지로였어요. 칠판에 눕혀놓고 장기간 전기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뚜렷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으면 체포돼 사형당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랬겠어요”

재심의 기회도 박탈한 채 인혁당 사건 피고들을 서둘러 처형한 다음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민주회복 국민회의는 각기 성명을 발표, 박정권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규탄하였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성명을 잠깐 살펴보자.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판결이 있는 다음날 8명의 인혁당 관련자가 사형집행된 사실은 우리 성직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울부짖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 성직자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행되어 간 뒤 군법회의 재판정에서 한 두 번의 눈길만을 서로 주고 받았던 가족들이 단 한 번도 면회허락이 안된 비인도적인 처사로 1년만에 관에 싸인 싸늘한 시체로 맞이해야 하는 그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그들과 그들 가족들의 최소한의 요구,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개재판을 해달라는 안타까운 바람이 묵살된 채 사형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애처롭게 생각한다. 변호사가 확인한 재판기록의 변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혁당 관계 사건은 파기 환송될 요건이 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박정희 정권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사형집행 다음날인 75년 4월 10일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어진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⑨ 민청학련 사건의 의문점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이 검거된 계기는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2차 인혁당 관련자들과 민청학련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북괴의 사주 아래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물은 여정남이었다. 경북대학교 학생회장을 거친 여정남은 이철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조직과 북괴를 잇는 연락책으로 지목됐다.

처음 민청학련 주모자 중 한사람을 체포하려 갔다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은 것이 여정남이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고 여정남 자신이 순순히 관련자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여정남이 연락책으로 지목된 것도 이 이유였다.

사형된 8명 중 1차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은 도예종을 포함해 4명. 남한내 대규모 지하조직의 구도는 이들을 주축으로 다시 그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본 유인태(前 국회

의원)는 이렇게 회고한다.

“처음 모든 것을 여정남 선배한테 수사용어로 제가 지시, 지령했다고 썼다. 그러나 한 4-5일 지나고 나니 여정남 선배가 지시, 지령한 것으로 전부 뒤바꾸더라. 그때 이게 뭔가 있구나 생각했다. 여정남 선배 뒤에 뭔가 배후를 만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유인태는 여정남과 호형호제 관계였다. 그는 여정남과 만나는 자리에 이철을 동행했었는데, 세 사람의 친분관계는 수사과정에서 어느새 조종과 복종관계의 조직체계로 조작 되어 있었다. 이철(前 국회의원)의원 역시 인혁당 자체를 조사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인혁당이란 사실, 그런 집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재판 과정까진 몰랐다. 그 분들 얼굴도, 이름도, 성향도, 존재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배후조종 당했다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배후조종을 받을 수 있겠느냐.”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에는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외에 일본공산당계 일본인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총련과 연계 됐다면 위험스런 일본청년들은 그러나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함께 석방됐다.

일본 공산당원 출신의 민청학련 배후 하야가와 요시하루-, 그리고 한국의 학생운동을 취재왔던 다치가와 마사키 기자-. 이들이 일본 공산당계, 즉 민청학련의 또 다른 배후였다.

하야가와 요시하루, 그의 사상적 전력과 검거의 내막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당시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민청학련 또 한사람의 연루자인 다치가와 마사키 기자의 한국어 통역을 맡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사건이 나기 3년 전 이미 일본 공산당을 탈퇴한 상태였고, 민청학련과의 연루는 느닷없는 일이었다. 느닷없기는 다치가와 마사키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다치가와의 죄목은 유인태에게 공작금을 건넨 일-. 5천엔, 그러니까 당시 우리돈으로 7500원을 건네준 죄로 20년의 징역형과 자격정지 15년을 받은 것이다. 다치가와는 지금 그 일을 이렇게 회고한다.

“제가 공산당도 아니고, 인혁당도 모르고, 조총련도 모르는데 취재하러 갔다가, 나도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다. 일본 주간지 기자로서 한국 학생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갔었고, 유인태를 취재했고, 인터뷰 취재비 5천엔, 그때 미국돈 20불을 유인태에게 줬다. 여행중이라 별로 돈 없었지만 불고기나 사 먹으라고 인터뷰 취재비 조로 준 돈이었는데 그 돈이 나중에 북한에서 받아 학생들 선동자금으로 썼다고 날조됐다.”

난데없이 사건에 연루된 두 일본인의 경험은 한국에 대한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당시의 한국 사회를 말하는 한 징표가 되어 있었다.

같은 민청학련의 배후조종 혐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조총련계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받을 받았고, 인혁당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치가와 마사키 기사는 사석에서지만 당시 수사관이었던 이용택 중앙정보부 6국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사과를 받았다고도 했다.

사건 당시에 소외되었고-, 지금까지도 소외 받는 인혁당 관련자들. 그러나 정작 진실을 증언할 핵심적인 인물은 오늘, 이 자리에 없다.

⑩ 사건은 묻혀지고...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노력들

인혁당 관련자 8명이 사형된 지 25년-. 인혁당 사건의 조작논란은 사형 당한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문제로 모아졌다.

열사나, 간첩이나... 억울한 죽음이나, 합법적인 형 집행이었느냐...

서둘러 집행된 사형과 고문의혹 앞에 이제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2차 인혁당 관련자들을 사형에 처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하재완의 노트였다. 하재완이 송상진과 함께 북한방송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노동당 5차 당대회 강령’은 이들이 북한과 내통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로 제시됐다. 하재완과 송상진이 자주 북한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그들이 왜 북한방송을 받아 적었는가의 의문은 묻혀졌다. 간첩이 전달한 것을 베껴 적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 당시 북한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만일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도 몇 년 이하의 징역 정도였다. 그러나 그때는 민청학련에 동조한 것만으로

도 사형이 선고되던 긴급조치 시대였다.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범집행은 강행될 수 있었다.

하재완의 노트는 그와 송상진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6명의 가장 큰 사형 이유 역시 노트를 돌려보고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당시 15년 형을 확정 받았던 임구호의 얘기는 달랐다

“정보부 사람이 자기가 부르는대로 받아 쓰래. 부르는대로 받아 쓰니까 그게 하재완 씨 노트 요약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새벽까지 다 외우래, 나보고 암기를 하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구. 처음에는 외울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외워지지도 않더라구.”

어두운 긴 시대를 지나며 사건은 묻혀졌고, 여덟명의 죽음은 잊혀졌다. 억울한 죽음을 애달마 하는 이들에 의해 통일열사의 이름을 달았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한 이름은 아니다.

세월의 힘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겐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아이들의 경우 친구들로부터 빨갱이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는 것은 물론, 친구의 부모로부터 거부대상 1호였다. 심지어 선생님에게서조차 ‘빨갱이 새끼가 이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야 했다. 가장을 잃은 현실 앞엔 경제적인 압박 또한 컸다. 그러나 그 또한 언제나 뒷전의 문제였다. 이들 앞엔 늘 외롭고도 두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물론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같은 빨갱이로 오인 받아 너희들도 잡아간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항상 그들을 따라 다녔다. 세월이 흐르면 약이라고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약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살아있음으로 죄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세상을 향해 더 이상 할 일도, 가족을 위해 할 일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소 꼴을 먹이다 잠들던 고향 언덕도 더 이상 설자리가 될 수 없었던 지난 세월-. 왜놈 치하의 하늘 보다 더 흑독했던 그 시절, 그들에게엔 친구들이고 고향 사람들이고 간에 그들을 대하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 부담감이 그들에게엔 이방인의 착잡함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지난 91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여덟 명 가운데 두 사람, 여정남과 이재문의 이름이 세상의 밝은 빛 아래로 나왔다. 모교인 경북대학교에 그들의 추모비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추모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추모비가 세워지고 5년 뒤, 96년 6월 18일 밤 학생들의 시위는 시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었고 그 격전의 다른 한편에선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의 추모비가 경찰에 의해 뽑혀 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엔 빼앗긴 추모비의 흔적만이 남았다.

영남대에서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의 추모비가 95년 4월 9일 세워졌다. 그리고 그 역시 같은 해 5월 10일 추모비가 뽑혀 나갔다. 지금 그 자리엔 나무로 만든 작은 추모비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추모할 수 없는 이름으로 남아버린 인혁당-

그 역사의 이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추모비를 세우고, 빼앗기는 과정들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인혁당 관련 사형자들에 대한 첫 공개 추모식이 열린 것은 지난 99년 4월이다. 공개 추모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가웠다. 이종찬 국정원장의 조의문도 받았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24주기 추모식을 맞아 다시 한번 가신 님들의 영전에 조의를 표합니다. 인혁당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애석한 마음을 함께 하며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천년인 지금-, 남은 우리들에겐 숙제가 있다.

불온한 이름, 인혁당-. 그 세 글자에 진실을 매김하는 것이다. 그들이 과연 국가변란을 기도했던가, 그들에 대한 재판은 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국이 증거로 내놓은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지금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정확히 조사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관련자 여덟 명의 급작스런 사형집행에 정치적 의혹은 없는지... 더불어 그들이 진정으로 염원했던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

이돈명 변호사, 문정현 신부

집행위원장 :

김형태 변호사

집행위원명단

김남일 김동원 김봉우 김영욱 김찬수 김창남 도재형 문국주
문성근 박원순 박충렬 송철환 신동숙 유종순 이영우 이영교
이우정 이석범 이종걸 임구호 조성우 조성범

지도위원 명단

강신석 고영구 광영희 권오현 권혁동 김금수 김명진 김소라
김승오 김승훈 김영미 김재열 김진주 김 현 김형수 김홍진
나경일 나효우 남학현 노진민 도강호 도한규 도혁택 두봉주교
맹찬형 문한성 박동구 박순경 박순희 박용길 박정기 박정일
박종근 백남해 변연식 서경원 손순심 오갑현 오남한 오동영
오수영 오용호 유진영 유현석 윤공희 윤기국 윤영전 윤인섭
이계창 이근례 이기형 이문규 이문상 이병학 이석호 이성재
이순영 이영선 이오덕 이용석 이이화 이재술 이재형 이정숙
이준희 이창복 이창수 이충원 이태환 장두석 장영달 전창일
정범구 정점매 정치영 조성교 조성학 조옥중 진병호 차광호
천영세 최규엽 최금자 최기식 최영도 최용철 한의열 현기영
호인수 홍근수 홍현웅 황범하

대책위관련 일지

• 1998년

- 9월 24일 인혁당 대책위 1차 집행위원회 소집 공고 및 인혁당 사건 관련 마산 MBC-라디오 인터뷰
- 9월 2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모사업회 캠페인 방문
- 9월 29일 가칭)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 11월 4일 유가협,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시작(인혁당 희생자 유족 참여)
- 11월 5일 이기형 시인 내방, 인혁당 추모시 수령
- 11월 9일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 위원회」 발족식

• 1999년

- 1월 5일 인혁당 대책위 관련업무 이유정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결정(재심준비 등)
- 1월 27일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0일 대구 인혁당 회의 참석
- 4월 6일 광주 PBC 라디오 - 인혁당 사건 관련 인터뷰
-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천인 선언, 성명서 발표 인혁당 24주기 추모식·추모공연(명동성당 문화관)
- 4월 9일 대구지역 인혁당 24주기 행사
- 6월 7일 KBS 인혁당 관련 취재 협조
- 7월 28일 인혁당 관련 간담회
- 9월 3일 인혁당 유가족과 재심준비 변호인팀모임, MBC기자 인터뷰
- 9월 20일 인혁당 대책위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22일 추모단체 연대회의의 방문 -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회의
- 9월 27일 인혁당 관련 MBC 취재 지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하여 각 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 9월 29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의문사법안관련 회의 참석

- 10월 13일 이부영 한나라당 총무 면담 - 의문사 특별법 민간단체안 전달
- 10월 14일 김성재 민정수석 면담 - 의문사 특별법 민간단체안 전달
- 10월 21일 오글 목사 인혁당 유족 만남 - 푸른영상 인터뷰
- 10월 26일 올바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위해 광고비 분담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
- 10월 29일 추모단체 연대회의와 학술대회 준비 상황 점검 모임
- 10월 31일 MBC - TV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인혁당 사건 보도
- 11월 5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참석
- 11월 10일 인혁당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원으로 간담회
- 11월 11일 국회앞 농성장 방문
- 11월 22일 인혁당 대책위 지도, 집행위원 회의
- 11월 25일 올바른 법제정을 촉구하는 신문 광고(한겨레신문)
- 12월 28일 두 개의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 12월 30일 유가협 천막농성 해단식(422일)

• 2000년

- 2월 인혁당 자료집 제작 의뢰
- 3월 2일 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단체 연석회의 / 인혁당 대책위 집행위원회
- 3월 21일 법시행을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집행책임자회의 (명칭 - 가칭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로 하기로 결정)
- 3월 30일 가칭)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자회의 및 공청회 참석
- 4월 3일 가칭)민주화운동국민연대 집행위 참석
- 4월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식 참석
- 4월 7일 천주교인권위 인권교육(주제 - 인혁당 사건의 진상과 희생자에 대한 추모 (여상화씨 참석))
- 4월 8일 인혁당 추모광고 및 추모제 알림
- 4월 10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고(한겨레-유종순집행위원)
- 4월 11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 참석
- 4월 27일 인혁당 25주기 추모제

인혁당 대책위는 98년 11월 발족이후 20여 년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인혁당 사건의 진상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1차적으로는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 자료수집, 설문지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등의 작업을 진행하여왔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두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이 포함되도록 민간단체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각 당에 안을 전달하는 등 교섭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생명권 침해 조항과 재심조항 등이 삭제되는 등 진상을 밝혀내기에 한계가 많은 법이 통과되었다. 현재 지난 4월 6일 발족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에 참여하여 5월 13일부터 시행될 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올바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푸른영상에서 제작중인 인혁당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6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이 글을 써주신
방송작가 김유정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